

제107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일시·장소: '24. 8. 19.(월) 15:00 ~ 17:00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□ 참석자

- 해양경찰위원회 : 길태기 위원장 등 ^{박용철 위원 온라인 참석, 전대양 위원 불참} 해양경찰위원 6명
- 해양경찰청 : 기획조정관, 안건 소관 국·과장, 기획재정담당관 등 12명

□ 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10건 (원안의결 6, 수정의결 4)

【심의·의결 10건】

연번	형식	안건명	내용	심의결과	부서
1	고시	「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전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속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나포 포상금 상향(최대 100만원→160만원) 및 포상금 지급 유형 세분화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주요내용) △ 중대위반 불법조업(최대160만원), △정선명령불응 등(최대 100만원), △ 그 밖에 재한조건 위반(최대 80만원) • 변화된 단속 환경(단독 작전→다수 세력 참가)를 반영한 포상금 배분 기준 명확화 • 포상금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포상금 사용례 구체화 등 개정 	원안의결	경비작전
2	훈령	「함정 운영관리 규칙」 전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변화된 경비정책을 행정규칙에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주요내용) △표준일과표 개편(운영 재량권 부여), △항해당직관 보직기준 마련(해기사 면허 보유자 등) 등 • 당직휴무 사용기간 현실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기존) 근무 종료 후 공휴일 제외 10일 내 사용 (개선) 공휴일·해상종합훈련일·평일휴무일 등 제외 10일 내 사용 • 함정 대외지원 기준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내용) 경비활동 지장 초래, 대체수단 있는 경우 지원불가 원칙 <p>수정사항 대외지원 결정권자를 명확하게 하도록 조문 수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┌ 소속기관장 : 공식성 지원 업무, 해경 정책 추진 부합 대외기관 업무 └ 직근 상급기관장: 해양경찰 홍보 관련, 업무협약 범위 내 업무, 2개 이상 관할구역을 향해하는 경우, 소속기관장 판단 곤란 	수정의결	
3	고시	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주광역 VTS 개국('24.9월) 관련 관제구역·호출명칭 및 관제통신 채널을 신규 지정 • 현장 실정에 맞도록 관제통신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내용) 도선선이 도선사 승하선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, 현장 실정에 따라 도선선 이동신고 면제 가능 • 행정규칙 내 관제구역 표기방법에 시각자료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기존) 경위도 좌표 → (개선) 경위도 좌표 + 관제구역도 	원안의결	해상교통관제

연번	형식	안건명	내용	심의결과	부서
4	고시	「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제항로표지협회(IALA)의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행정규칙에 반영 ※ (주요내용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분야 및 과목 변경 (8개 분야 211개 과목 → 7개 분야 219개 과목) 교육과정 중 전면 개정된 3개 과정(관제사 기본교육, 선임 선박교통관제사교육, 현장직무교육)의 교육내용 개정 등 	원안 의결	해상 교통 관제
5	훈령	「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		원안 의결	
6	훈령	「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VTS 통합플랫폼 연구에서 개발된 데이터 표준을 향후 도입되는 시설·장비에 적용하도록 개정 	원안 의결	
7	부령	「수상구조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간 수난구조 참여자 활동비를 참여자 직업을 감안,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(약 8% 인상) ※ (기존) 78,880원(산출기준 : 최저임금 x 8시간) (개선) 85,360원(산출기준 : 선원 최저임금의 1일 급여) 	원안 의결	수색 구조
8	훈령	「해양경찰 구조·구급 장비 도입위원회 운영규칙」 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조·구급 장비 도입 관련 주요사항 선정·심의·평가를 위한 '장비도입위원회' 규정 마련 ※ (주요내용) △위원회 설치 및 기능, △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 <u>수정사항</u> 제9조제2항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해측 조문을 위원 해측 기준을 규정한 제10조 이동하여 조문을 정비 	수정의결	
9	고시	「(해양경찰청)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·시행 (9.20)에 따른 공로자 보상 관련 추가사항 규정 ※ (주요내용) △공로자 등 용어의 정의, △관서별 주무부서 지정, △보상금심사위원회 설치, △보상금 기준, △보상금 지급방법 등 규정 <u>수정사항</u>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(관서장)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해양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총경·경정 계급 경찰공무원이 대행하도록 <u>대행권자 명확화</u> 	수정의결	수사 기획
10	훈령	「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선전화 운용일지 작성법 개정(수기 → 전자적 방식) 해양안전통신국 송·수신소에 대한 파·출장소장 순찰(주 1회)을 폐지하고 관할 해경서·지방청에서 점검(월 1회) 태풍·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인접 해경서 정보통신계의 지원 조항 신설 <u>수정사항</u> 해양안전통신국 무인화 장비 점검 관련 조문 정리 ※ 순찰 주기가 동일한(월1회) 대상(지방청경찰서 통신계장)의 조문을 병합 <u>수정사항</u> 비상상황 및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접서 통신계에서 지원할 경우 지원절차, 지원대상, 지원사항 등을 명확하게 수정 	수정의결	정보 통신